

## 한국사회의 다원화와 집단갈등

송 복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 왕 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한국사회의 집단간의 갈등은 과연 '사회악'인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은 될 수 없는가? 이 글은 후자에 대한 처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갈등은 필연적이며 사회통합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집단들간의 이해관계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그것을 선의의 경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다양한 이해집단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중재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 무엇이 문제인가?

산업화의 진행과 집단간 갈등은 경험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병행해 왔다. 늘 병행해 온 것만큼 집단간 갈등은 산업화 과정에선 으레 일어나는 定狀현상

\* 필자 송 복은 「조직과 권력」,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유동성 사회: 한국사회 변화의 특징」, 「사회문화적 변화와 노사관계」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였다.

\* 필자 김왕배는 연세대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논문으로 「한국의 자본축적과 지역구조화」, 「계급의 공간분화와 지역불균등 발전」 등이 있다.

으로 인식되기도 했고 혹은 정반대로 사회적 病理현상으로 크게 주목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단간 갈등은 으레 일어나는 定狀현상인가 심각한 病理현상인가, 혹은 아니면 단지 해결방식의 미숙에서 오는 오직 강도만 높을 뿐인 갈등현상인가, 왜곡되고 고질화된 집단이기주의에서 마냥 솟아나는 구조화된 갈등현상인가.

어느 면에서 한국사회의 집단갈등, 집단이기주의는 권위주의적인 획일적 통제

가 약화되면서 즉, 민주화의 과도기적 틈새에서 집단끼리 발생하는 일시적 증상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의 구조 속에 누적되고 침전된 병폐적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경쟁'과 '양보'를 민주사회의 美德으로 인정하면서도 막상 쓰레기매립장이나 원자력발전소, 혹은 장애자복지원 등의 장소로 고시가 되면 여지없이 지역주민들의 집단적 반발이 나오게 되고(지역이기주의), 일부 기업의 경우 노사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줄다리를 계속하는가 하면 얼마전 우리사회를 온통 시끄럽게 하였던 藥師會와 漢醫師會 간의 대립은 '집단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약사회와 한의사회 간의 대립은 양측의 이해집단들이 '국민건강의 보호'라는 절대 명분을 앞에 걸고 조제권 독점이라는, 영역수호를 둘러싼 싸움으로 진행되었다. 명분이야 어떻든 집단간의 '이해관계'의 싸움이라는 점이 명백한데 그 대립의 전개양상은 매우 '극단적'이고 '자학적'이며 '他者 피해적'이다.

사용자들의 건강을 볼모로 '제몫' 찾기에 급급한 '추한 싸움'이라는 빗발치는 여론의 질타와 함께 급기야 사법적 처리가 가해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고, 그 결과, 갈등이 잠시 수그러진 듯이 보이지만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뭔가 깨운하지 못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한국사회의 갈등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갈등을 해소해나가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개인적 갈등이든 집단적 갈등이든, 갈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갈등은 곧 사회병리를 유발하는 '社會惡'이며, 안정과 질서를 해치는 유해인자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다보나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기도 전에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 모두를 싸잡아 비난하는 소위 '兩非論'적 시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때때로 갈등이 보다 나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유연한 사고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다.

둘째는 '집단이기주의'라는 표현 속에 나타나듯이 우리사회의 갈등 양상은 개별적이기 보다는 집단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집단 속의 개인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대안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개인은 그가 속한 집단에 함몰되고, 집단의 가치와 목표가 최우선시되는 '집단폐쇄성'을 갖는다.

셋째는 갈등을 풀어나가는 이해당사자 집단들의 문제해결 역량이 지극히 낮다는 것이다. 타협할 줄도 모르고 타협하는 방

법도 모르며 타협 자체가 곧 '지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눌러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을 내 보이고 있다.

넷째는 이해집단들이나 국외자들은 궁극적으로 갈등의 해소를 여전히 국가의 통제력에 호소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국가의 통제력이 제때 가해지지 않는 경우 국가는 곧 무능력자로 손가락질을 받는다. 또한 국가는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유연하게 중재하기보다는 여론의 향배를 살피고 있다. 여론을 등에 업고 임시방편적 치유를 하려 한다는 점에서 갈등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집단이기주의라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집단간의 '갈등'은 과연 사회병리이며 社會惡인가? 그 갈등의 是非非가 가려지고 그 결과가 사회발전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는 없는가?

그렇다면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 집단이기주의라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집단간의 '갈등'은 과연 사회병리이며 社會惡인가? 그러한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들과 해소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사회전체의 평가에 의해 是非非가 가려지고 그 갈등의 결과들을 사회발전의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는 없는 것인가?

## 산업화와 다원사회의 갈등구조

### 산업화와 다원화

산업화는 간단히 말해 사회구조의 '분화' 과정을 통하여 단순한 사회형태로부터 복잡한 사회형태로 이행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前산업사회는 단순한 사회형태로 유지되었지만 산업사회는 경제, 정치,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사회제도가 보다 세분화되고 그 역할 또한 다양해진다.

즉, 산업사회는 하나의 '집합감정'이나 규범, 이해관계에 의해 결속된 사회가 아

1) 사회학자 뒤르켄(E. Durkheim)은 산업사회의 이행과정을 하나의 '집합의식'으로 연대화된 사회 즉, 기계적 결속관계의 사회로부터 인공과 분업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문명집단들이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맺는 '유기적 결속관계(organic solidarity)'의 사회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Durkheim 1922). 기계적 결속의 사회에서는 개인 혹은 개별적 집단들이 다양한 관심이나 이해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화된 하나의 규범, 이해관계에 얽매는 사회이다. 그러나 유기적 결속의 사회에서는 분업을 바탕으로 사회가 짜여져 있으며 이러한 분업화된 개인, 집단들이 서로 다양한 역할과 이해를 표출하고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유지해 간다.

나라 다양하게 분업화된 집단들이 다양한 규범과 목표를 지니면서 유기적으로 연대화된 사회를 말한다.<sup>1)</sup> 산업화는 이와 같이 사회구조를 다양하고 복잡하게 하는 즉, 다원화를 촉진시키는 강한 추동력을 갖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산업화가 사회의 모든 분야를 균등하게 다원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경제영역에서는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되면서도 정치영역에서는 여전히 권력의 중심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사회유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권의 일당지배 체제하에서의 산업화가 그렇고 이른바 '개발독재'로 규정되는 후발산업국가의 경우들도 그렇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그리고 그 이념에 근거한 정치체제)이 매우 밀접한 '선택적 친화력'을 지니듯<sup>2)</sup> 산업화는 사회를 다원화시키는 그러한 경향성과 추동력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사회를 다원화시

키려는 산업화의 '힘'을 억지로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일원화된 정치체제는 오래가지 못하고 강한 저항을 받거나 무너지는 경우들을 또한 얼마든지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sup>3)</sup>

**산업화는 사회구조를 다양하고 복잡하게 하는 즉, 다원화를 촉진시키는 강한 추동력을 갖고 있다.**

산업화에 의한 다원화 과정은 구조의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적 분화는 우선 기술(technology)의 변화에 의해 수반된다. 인류의 역사가 기술발전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듯, 인간은 보다 발전된 기술을 개발시켰고 기술은 사회의 분화를 촉진시켰다. 기술은 노동의 분업을 증대시켜 다양하고 전문화된 직업과 직무를 낳았다. 한편 사회의 분화와 함께 정치영역의 권력의 분산화(decentralization)가 발생하였다. 다양한 집단들로 나뉘어진 '분화된 사회'에서 권력은 보다 많은 하위집단으로 이양되고 여러 하위집단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상대적 자율성'을 행사하는 사회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산업화와 함께 문화제도 역시 다원화의 추세를 보여, 어느 한 집단이 내

2)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그리고 그에 대한 급진주의자들의 비판을 정리한 글로 Jessop, "Capitalism and Democracy: The Best Possible Political Shell?" 이 있다. 아울러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다원적 견해를 소개한 것으로 Alford and Friedland, *Power of Theory*가 있다.

3) 역사적인 내용에는 편차가 있지만 후발신흥공업국들 즉, 한국이나 대만, 싱가포르 등의 권위주의적 정권이 강한 저항을 받았거나 받고 있고, 남미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경우에서처럼 더 이상 통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군사정권의 몰락을 들 수 있다.

세운 규범이나 생활양식 혹은 단일한 이념, 종교체계가 생활의 지향점이 되기보다는 다양한 가치나 생활규범, 행동양식이 병존하는 이질화된 문화양식의 사회가 나타나게 되었다.<sup>4)</sup>

### 다원사회의 갈등양식

이와 같이 산업화와 함께 다원화 사회는, 몇몇 소수의 직업이 사회를 구성하고 일부 집단이 권력을 행사하는 그리고 일률적인 문화양식이 지배적인 전근대적 사회와 달리 다양하고도 이질적인 집단, 규범, 제도로 열개되어 있는 사회이다. 다원사회는 글자 그대로 원의 중심이 다양한 사회이다. 마치 단세포의 생물이 다세포로 증식하여 각 세포마다 '핵'을 갖는 그러한 이치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는 이러한 다원사회를 촉진시키며 이질화된 사회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치고, 부딪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다원화 사회가 정작 다원화 사회로 존재하는 것은 사회구조의 '분화'의 연속과정으로서 '통합'이 존재하기 때문

이다. '분화'와 '통합'의 메카니즘을 통해 사회의 신진대사가 원활할 때 다원화 사회로 존립할 수 있다. 다양하게 이질화 된, 그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상충하고 격돌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을 폭넓게 수용하고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키웠을 때 다원사회는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다.<sup>5)</sup>

이렇게 사회적 역량이 상승된 사회에서는 갈등이 분화되고 있는 사회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높은 차원의 '통합'을 낳는 에너지로 기능한다. 때때로 집단간의 불화와 알력이 사회 해체의 증후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갈등은 어디까지나 제도적 통로를 따라 통합의 메카니즘으로 흡수되어, 사회를 해체하고 분열시키기보다는 사회를 더욱 굳건하게 통합시키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갈등이 사회의 병리현상으로만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자생력과 자존력을 향상시키는 에너지로 기능하기도 하는 것이다.<sup>6)</sup>

따라서 다원사회에서의 문제는 갈등이 발생한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갈등을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흡수하

4) 산업화는 위쓰(L. Wirth)가 오래전에 지적했듯이 다양한 이해관계와 생활양식을 지니는 도시생활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가져왔다(Wirth).

5) 이는 구조기능론자들이 사회변동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 즉, '적응적 향상(adaptive upgrading)' 과정과도 통하는 바가 있다(Parsons 1951, ch. XI.).

느냐 하는 데 있다. 즉, 구조의 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해소하는 사회적 통합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다. 이러한 다원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즉 정당한 게임(game)과 룰(rule)을 통해 갈등이 표출되는 사회에서는 집단간의 갈등이 위협적이고 반사회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당연하고 '오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의 한 현상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갈등이 이해당사자 간의 혹은 집단들 간의 타협과 협상(bargaining)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 기대된다.

다원사회에서의 국가는 이런 여러 집단들의 사회갈등과 이해관계들을 매개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는 권력의 분산화에 대한 상대적 대응으로 권력의 집중화를 피하면서 물리력과 강제력, 이데올로기를 동원하여 다원화된 시민사회의 영역에 개입하지만 원칙적으로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sup>7)</sup>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다원사회는 그만큼 다양한 집단들이 다양한 세계관과 이해관계와 생활양식을 갖고 살아가는 '생활세계'의 장, 곧 시민사회가 성숙하여 여러 갈등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능동적으

로 대처하는 역량이 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원사회는 산업화와 함께 사회구조의 '분화'와 '통합'이 연속 과정으로 발생하는, 그 결과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제도적 장치를 통해 순치시킬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킨 사회를 말한다.**

요약컨대, 다원사회는 산업화와 함께 사회구조의 '분화'와 '통합'이 연속과정으로 발생하는, 그 결과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제도적 장치를 통해 순치시킬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킨 사회를 말한다. 역할분화, 집단들 간의 '경쟁'과 '타협'이 존재하고, 이러한 과정이 집단들 간의 자율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민사회와, '조정자'로서의 국가등이 수직적으로 위계화되어 있기보다는 수평적으로 짜여져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원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단순히 사회를 해체시키

7) 물론 이러한 견해는 달(R. Dahl) 류의 이른바 다원주의적 관점에 기반을 둔 것이다. '도구주의적 견해'나 '구조주의적 견해'를 주장하는 신맑스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를 부르조아 계급의 지배를 위해 기능하거나, 어느 특정한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자본주의의 체제유지를 위해 노동계급을 억압하는 실제로 파악하고 있다(Gold and Wright 1975).

6) 코저(Coser)는 이미 이러한 갈등의 사회적 기능을 논의한 바 있다. 갈등의 해소는 오히려 사회통합에 기능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Coser 1958).

고 병들게 하는 社會惡이 아니라 의당 일  
어날 수 있고, 때때로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인식되기도 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사회의 다원주의는 사회적  
갈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한  
다는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갈등은 과격성과 폭력성을 많  
이 상실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특히 한 사회에 있어서  
자유란 다양성과 차이점과 갈등의 정당성  
및 창조성을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  
다.” (정대연 1984, 368)

## 한국사회의 다원화와 갈등구조

### 갈등구조의 특징

#### ① ‘수평적 갈등’으로의 이행

한국사회는 지난 3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만큼 급  
속히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고, 신흥공  
업국의 선두주자로서 선진사회의 문턱에  
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 10%를  
웃도는 경제성장률, 세계 13-4위권의 국  
민총생산, 세계 10위권의 무역거래량, 조  
선이나 반도체와 같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일부 제조업분야의 생산량  
등 몇 가지 양적 지표가 이러한 사회역량  
의 증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한국  
사회는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불가피한  
구조적 ‘분화’와 ‘다원화’를 경험하게 되  
었다. 농업 위주의 산업구조는 이미 제  
조, 서비스분야 위주의 산업구조로 바뀌  
었고, 정보산업과 같은 이른바 제4차 산  
업부분이 주도하는 후기산업사회의 경향  
마저 보이고 있어 새로운 산업, 새로운  
직종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  
다.<sup>8)</sup> 직업구조의 양적, 질적인 성장뿐 아  
니라 계층구조 역시 단순한 형태에서 보  
다 복잡한 형태로 변화하여 다양한 속성  
을 지니는 ‘화이트칼라’층이 두터워진 것  
도 사실이다.<sup>9)</sup>

시간적으로는 매우 급속하게, 공간적  
으로는 매우 밀도 높게 사회의 구조적  
‘분화’와 다양화가 진행되면서 ‘갈등’ 역  
시 곳곳에서 분출되었고 그 갈등양상도

8) 또한 생활의 생태학적 변화를 나타내는 도시화율을  
보다라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정도로  
급속하여 농촌과 도시 인구비율이 60년대 7:3  
에서 80년대 3:7로 역전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  
다.

9) 직업수의 증가를 보면 1974년 1,535 개에 불과하  
던 것이 1986년에는 1만 2,650 개로 8 배 이상 증  
가하고 있다. 화이트칼라층의 성장을 보면 1970년  
대 전국 취업자의 14.6%에서 1980년에 20.3%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이 중에서도 전문기술직 및 사  
무직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정근식  
1988).

시대적으로 변하는 증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최근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의 변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간단히 말해 '수직형 갈등' 구조에서 '수평형 갈등'의 구조로 갈등의 대립구도가 점차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가 대 시민사회 집단 간의 대립 구도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들 간의 갈등구도로 전화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도 한국사회의 많은 갈등은 전자의 형태가 지배적이고 앞으로도 그 갈등은 양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는 제대로 나타나거나, 나타날 수 없었던 후자형태의 갈등이 현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변화의 특징은 '수직형 갈등' 구조에서 '수평형 갈등'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국가 대 시민사회 집단 간의 대립구조가 시민사회의 다양한 집단들 간의 갈등구도로 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사회는 국가가 산업화의 '프로젝트'를 직접 구상하고 실행하는 국가주도의 사회발전 과정을 경험해 왔다. 정치가 사회의 함수이기보다 사

회가 정치의 함수였던 한국사회에서 국가는 사회의 前영역을 통제하는 총체적 관리자였다.

국가는 '부'와 '권력'의 분배를 직접 관리하고 '이데올로기'를 독점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사회의 갈등은 '부'와 '권력'과 '이데올로기'를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국가와, 저항집단들 사이에 매우 첨예화된 형태로 나타났다. 국가는 국가의 행위(정권유지와 산업화)를 따르는 영역을 제도권으로 포섭하는 대신 국가의 행위에 反하는 집단을 억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다루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갈등'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완고하고도 경직된 권위주의적 국가는 시민사회의 어떠한 집단적 행위도 금지하였다.

가시화된 갈등의 대립구도는 국가 대 저항집단으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었고, 상대적으로 왜소한, 상대적으로 다원화가 덜 된 시민사회의 집단들 간의 갈등은 다분히 '잠재적'일 수밖에 없었다. 즉, 국가는 강력한 물리적 제재수단을 통해 사회영역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을 한시적으로 묶어 두었고 따라서 현시화된 갈등의 형태는 주로 국가의 정당성(때로 체제의 정당성)을 묻는 집단과 국가와의 대립형태로 나타났던 것이다. 반면 정권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정권 스스로가 민주주의



의 원리를 정착시키려는 최근 한국사회의 갈등 양상은 그동안 잠재되었던 시민사회의 영역 내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들 간의 반목과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사회에서는 시민, 시민사회라는 어휘 자체가 수학적 용어로 쓰여졌다. 언어는 존재 하였지만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민, 시민사회는 그러나 산업화 과정의 '의도 하지 않은 결과'로 산출되어 자리를 잡아 가고 있었다.<sup>10)</sup> 이미 산업화가 배태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시민사회는 다원화된, 다양한 이해와 가치와 생활규범을 갖는 개인과 집단들로 구성된 영역이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숨죽이고 있던 자기 목소리들이 산업화, 다원화, 민주화의 과정에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이며, 거기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특정한 생활상의 이해를 갖는 집단들 간의 대립 즉, '수평적' 인 갈등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림 1〉은 산업화와 다원화를 거치면서 변화해 가는 갈등의 대립구도를 나타

- 10) 한국사회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최근의 일이다. 참고로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참조.
- 11) 슈미터(Schmitter)는 포섭(inclusion)과 배제(exclusion) 개념을, 「조합주의적 국가」의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 오도넬(O'Donnell)은 '관료적 권위주의'의 국가전략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바 있다.

내 본 것이다.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에서 국가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영역을 배제(exclusion)하고 적은 부분을 제도적으로 포섭(inclusion)하지만,<sup>11)</sup> 국가의 권력이 민주주의적이고 시민사회의 영역이 확장된 사회에서는 국가에 의해 배제되는 부분(예컨대 체제에 도전하는 급진적 집단)은 상대적으로 작고 포섭 영역은 그만큼 넓어진다. 전자의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왜소화된 시민사회의 집단간 갈등은 국가의 통제에 의해 잠재화 되면서 국가 대 배제영역간 갈등이 현시화된다. 그러나 다양한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되고 국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보장받은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갈등은 바로 시민사회의 구성분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최근 한국사회의 집단갈등은 바로 이와 같은 변화의 추이를 반영하고 있다.<sup>12)</sup>

## ② 갈등의 부정적 인식과 '집단폐쇄성'

앞에서 밝혀 본 바와 같이 이해관계의

- 12) 물론 다시 강조하건대 국가 대 시민사회 영역의 집단간의 수직적 갈등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늘날 서구 선진사회에서도 국가가 더욱 시민사회의 영역에 개입함으로써 국가 대 시민영역 집단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폴란쯔스(N. Poulantzas)는 계급갈등을 증대하려는 국가의 노력으로 오히려 국가가 계급투쟁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하버마스(Habermas)는 국가에 의해 시민사회가 포섭되는 현상을 '생활세계의 식민화'라고 규정하였다 (Poulantzas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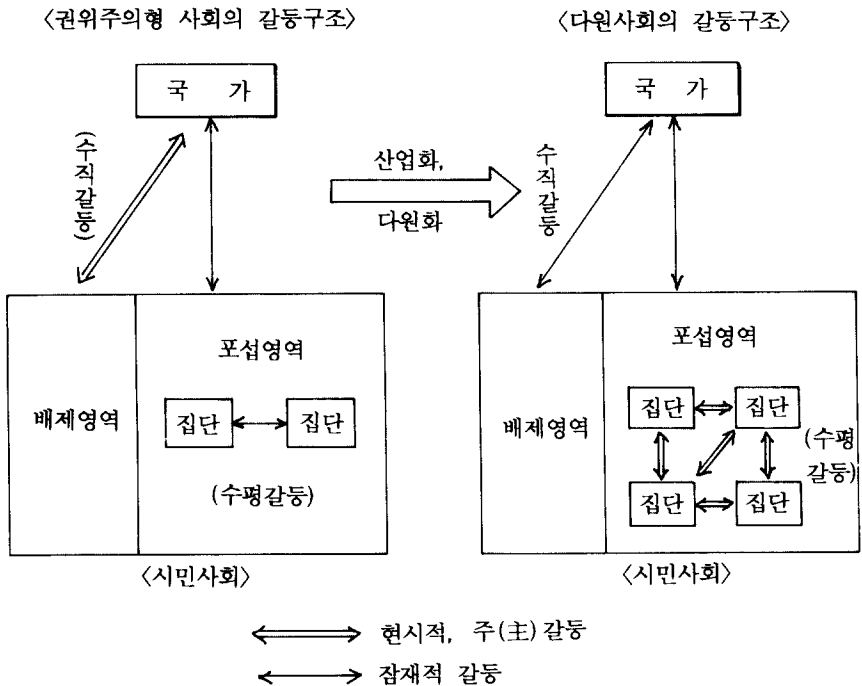
축이 다양한 다원사회에서 갈등은 필연적 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원사회의 문제는 '갈등'이 발생한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 결과를 어떻게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구조적 차원에서의 다원화 과정과 그 구조를 인지하는 가치체계가 병행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원화와 함께 여러 집단들 간의 갈등

이 표출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갈등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갈등은 곧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社會病理'이며 '社會惡'으로 간주된다.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하부구조는 다원화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원사회의 갈등을 인식하는 가치체계가 맞물려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함께 구조적 분화가 야기되었으나 위에서 설명한 다원사회

<그림 1>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 변화의 추이



로서의 가치체계까지 포함하는 ‘분화’-‘통합’이라는 正道를 걷지 못했다. 즉 ‘분화’는 발생했으나 연속과정으로서 그러한 분화과정을 추스리는 ‘통합’의 기능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였고, 제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갈등을 인식하는 가치체계에 있어서도 분화-통합의 연속적 과정이 뒤틀려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다원화의 과정은 일종의 불구화된 형태로 진행되었다. 당연히 분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그리고 때에 따라 개인 또는 집단들 간의 갈등이 사회를 다이내믹하게 움직일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기대되지 못하고 다만 社會惡으로 백안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갈등 양상의 또 하나의 특징은 집단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대 사회가 곧 ‘조직사회’인 만큼 다원사회에서는 개인 그 자체보다 개인들이 ‘어떤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만든 집합체’ 즉 조직이라는 집단을 통해 이해관계가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의 ‘집단성’이라고 했을 때 문제는 갈등의 표출양상이 ‘집단폐쇄적’인 또는 ‘집단지폐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상충된 해당 집단들이

상호교섭을 위한 창구를 만들지 못하고 즉, 개방적이지 못하고, 상대집단에 대해 우월한 입지만을 고집하고 주장하려는 ‘집단이기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한국사회 갈등 양상의 또 다른 특징은 집단성을 띠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갈등의 표출양식이 개방적이지 않고 ‘집단폐쇄적’인, 또는 ‘집단지폐적’이라는 의미이다.**

서구의 다원화된 사회가 비록 다양한 조직체들-이익집단-의 관계망과 그 관계망들을 통한 협상을 통해 운용되어 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 가치는 ‘개인주의’에 있음이 사실이다. 시민사회의 근간이 곧 개인들의 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성립되었으며 집단이나 조직은 궁극적으로 개인들의 보편적 이익을 달성하는 수단이며 도구이다.<sup>13)</sup>

이에 반해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개

13) 벨라(R. Bellah)는 미국사회의 경우 집단과 개인의 가치가 상충되었을 때 결국 집단보다는 개인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오랜 개인주의 전통은 어떠한 집단주의적 가치나 사회형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은 미국사회에서 요원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Bellah 1975).

인에 대해 집단 우선적인 오랜 전통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사회를 틀지우는 사회원리로서의 '가족주의'에 개인보다는 가족이라는 집단 우월성의 원리가 가장 잘 응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sup>14)</sup> 이러한 가족주의적 원리는 비단 가족집단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모든 사회영역에 스며들어 있어,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집단우월성의 원리를 재생산하는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집단주의'에서 집단은 늘 개인보다 앞서고 개인들의 비판적 태도나 '반대', '자율적인 선택' 등은 좀처럼 허용되지 않으며, 개인들의 개성이나 합리적 사고 등은 집단 그 자체로 융해되고 오직 '집단감정'과 '집단행위'만이 남는다.

그리고 이 집단은 자기 집단의 '이해'나 '목표'만이 최고의 가치나 규범이 된다. 타집단의 목표나 규범과 부딪혔을 때 집단은 생래적으로 자기 보호의식을 갖게 되며, 개인들은 타집단의 목표나 이해를 고려할 여유나 유연성을 보이지 못한다. 당연히 집단갈등은 매우 경직되고 '극단적'이며 격렬하게 나타난다. 강한 폐쇄성

을 지니는 집단끼리 부딪히는 '상충력'은 개인들 간의 마찰보다, 또는 개방된 집단들 간의 마찰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고 그 후유증도 훨씬 클 수밖에 없으며 통제비용도 그만큼 많이 지불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집단폐쇄성'을 지니는 갈등 양상은 보다 넓은 차원에서, 즉 집단을 초월한 광의의 장에서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가 '경쟁'과 '합의'를 통해 보편적인 공동선을 도출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집단폐쇄성'을 지니는 갈등 양상은 집단을 초월한 광의의 장에서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가 '경쟁'과 '합의'를 통해 보편적인 공동선을 도출하는 것을 가로 막는다.**

#### '반대훈련'의 부재

앞서 개관한 바와 같이 한국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를 이룩했고 산업화 과정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사회구조의 다원화가 진행되었다. 집중화된 정치권력은 상대적으로 하위집단들로 이양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획득한 시민사회의 영역이 서서히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한국사회는 이러한 다원화의 추세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고 다원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

14) 가족주의의 특징은 가족이라는 집단이 개인보다 항상 우선하며 개인들간의 관계가 위계화되어 있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주의는 비단 가족집단뿐 아니라 작업장이나 여러 조직에 배여 한국사회의 운용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한 이해집단들 간의 갈등과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갈등을 인식하는 것이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초보단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갈등은 곧 사회악으로 인지되고 갈등의 표출 양상은 지극히 경직되어 있어 '집단이기주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쳐 발생하는 갈등을 제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룰(rule)'이나 '게임'이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반대할 줄 모르는', '반대훈련의 부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집단은 집단대로, 상대방을 반대하면서 또한 타협할 줄 알고 합당한 대안을 수렴해 내는 방법을 모른다.

이는 우리 사회가 상대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개인, 집단 간의 경쟁이 '치열함에도 원인이 있다. 상대방의 처지나 위상을 성찰해 보고 자기의 행위를 고려하는 '상호 작용성'이나 '易地思之'의 교감을 가져볼 여유가 없이 급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쟁의 논리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경쟁적 모습은 이미 '전투사회'라고 명명된 바 있다.

"전투사회는 여유라는 것이 없고 기다림이라는 것이 없다. 그 여유를 부리고 그 기다림을 인내하는 사이에 그 전투에 곧 지고 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욱 전투사회가 된다. …… 이 전투가 더욱 치열해져 가는 사회에서는, 어느 산업사회에서 으레 일어나기 마련이고 또 그것을 그 사회 특징으로 하기 마련인 '반대'라는 것에 대해서 반응할 줄 모른다. '반대'할 줄도 모르고 '반대'받을 줄도 모른다. '반대'하는 사람은 모두 '놈'이 되고 적이 된다. 6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모든 큰 갈등들은 이 '반대' 훈련의 전무에서 비롯되었다." (송 복 1990, 6).

'반대'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개인과 집단은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개인이나 집단을 이분법적 사고로 단죄하는 식의 대응을 보이며 좀처럼 다원사회의 공존성의 원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러한 '반대' 훈련의 부재는 국가, 개인, 집단 모두에게 적용된다. 국가는 '반대'집단을 국가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사회 역시 그런 식으로 여론을 환기시키는가 하면, 개인이나 집단은 자존이 위협당하는 위협한 요소로 인식한다. 다원화의 추세가 불가역적임에도 불

구하고 한쪽이 다른 한쪽을 억누르려는, 그리하여 다원사회의 다른 쪽 원의 중심을 거부하는 모순적인 행위를 드러내고 만다. 공존의식은 없고 다만 흑백논리가 횡행할 뿐으로, 반대훈련의 부재에서 갈등의 해소 과정은 그야말로 자신의 뒤통에 충실하고 양보할 줄 모르는 '집단이기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반대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갈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고 일면적이며 그 갈등을 해소시켜 나가는 방법이 극단적이고 '자기중심적' 행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갈등을 일으키는 상대방의 행위는 곧 이기주의적 행위와 동일시된다.

이렇게 된 연유는 우선 국가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를 하나의 획일적 체계로 응고시키려 하였던 국가의 권위주의형 통제를 들 수 있다. 국가주도의 산업화는 이른바 '개발독재'라는 형태로 표출되었고 자원동원의 필요성과 국가관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는 '불일치' 보다는 '일치'를, '갈등'과 '대립' 보다는 '화합'과 '화해'를 요구하게 되었다. '갈등'은 '발전주의'와 '안보'의 논리로 배척되었고 갈등을 야기시키는 사람, 집

단은 反사회적인 대상으로 간주되었다.<sup>15)</sup> 이는 그동안 이른바 '위로부터의 개혁' 과정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들이 서로 자율적인 '담론'의 경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가대로 그동안 시민사회의 영역위에 '군림'하면서 강제력을 능사로 여겨 왔을 뿐 사회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원할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 갈등의 인식전환과 「제도화」

한국사회는 지난 30여 년 동안 미증유의 산업화를 겪어 왔고, 산업화는 중심축이 다양한 다원사회의 형태를 촉진시켰다. 노동의 분업이 증대되면서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고 '사회이동'이 빈번해지면서 계층구조가 다양해지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는 매우 빠르고 밀도 높게 이질적인 집단들을 형성시켰다. 그동안 국가중심의 사회체제 유지 원리도 부득불 시민사회의 원리와 병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사회는 많은 갈등을 증폭시켜 왔고 국가와 시민사회 집단 간의 수직적 형태의 갈등관계도 서서히 시민사회 영역 내의 집단과 집단 사이의 수평적 갈등관계로 전진되고 있다.

그러나 갈등이 구조분화 과정의 불가피

15) 또한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유교원리가 교육의 장에서 '순용과 화합'의 사회화 원리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한 산물로 표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이를 적절히 소화하고 해소할 만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갈등을 사회발전의 추동력으로 승화시킬 만한 '통합'이 존재하지 못하는 일종의 '부정합(dislocation)'의 사회구조를 드러내었던 것이다.

**갈등은 앞으로도 더욱 표출될 것으로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그것을 선의의 경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가는 모든 갈등을 포용하거나 심판하기보다 매개하고 중재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권력구조가 다원중심으로 옮겨가고 있고, 이미 후기산업사회의 증상들마저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는 한국사회는 더욱 다원화의 사회로 나아갈 것이고 갈등의 양이나 질도 그만큼 다양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수용하고 해소하느냐 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갈등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즉, 개인적으로 나타나든, 집단적으로 표출되든 갈등이 곧 社會

악이며 병리라고 하는 부정 일변도의 시각에서, 갈등은 필연적이고 사회통합을 오히려 증대시킬 수 있는 기능적 역할을 하기도 하며 사회발전의 에너지를 될 수 있다는 보다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고의 전환만으로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그 갈등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고 보다 보편적인 '담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권력과 억압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집단들의 등가의 목소리들이 흐를 수 있는 '혈관'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그것을 선의의 경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모든 사회갈등의 '해결사'라고 하는 사고도, 또한 그 기능도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국가가 모든 갈등을 포용하고 심판하기보다 다양한 이해집단들의 관계를 매개하고 중재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미 다원화된 시민사회가 자리를 차지해 가고 있는 마당에 시민사회의 집단들 간의 갈등은 시민사회의 역량에 맡기는 원칙이 요구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스스로 경쟁하고 타협하는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

갈등의 인식 전환과 갈등의 제도화야  
말로 성숙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한국  
사회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 참 고 문 헌

송 복. 1990. 「한국사회의 갈등구조」.  
서울: 현대문학.  
정근식. 1986. 화이트칼라의 성격규정을  
위한 연구. 김진균(외). 「한국사  
회의 계급연구」. 서울: 한울.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편). 1992.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서  
울: 한울.  
Alford, R. and R. Friedland. 1985.  
*Power of Theor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Bellah, R. 1975. *The Broken  
Covenant*. New York: A  
Crossroad Book.  
Coser, L. 1956. *The Function of  
Social Conflict*. New York:  
Free Press.  
Dahrendorf, R. 1959.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 Stanford Univ.  
Press. 정대연 옮김. 1984. 산업  
사회의 계급과 계급갈등. 서울:

홍성사.

Durkheim, Emile. 1922.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Glencoe :  
Free Press.  
Gold, D. and C. Lo, E. O. Wright.  
1975. Recent Development in  
Marxist Theories of the  
Capitalist State. *Monthly  
Review* (October, Novem-  
ber).  
Jessop, Bob. 1983. Capitalism and  
Democracy: The Best Pos-  
sible Political Shell? D. Held  
et al. *States and Societie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Parsons, T. 1951. *The Social System*.  
New York: Free Press.  
Poulantzas, N. 1978. *Political Power  
& Social Classes*. London:  
Verso.  
Wirth, L.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  
ology* 44.